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등〉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18호)

2025.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입법의 배경 및 전부개정안의 구성 .....               | 4  |
| 2. 목적·정의·기본원칙 등(제1조~제3조) .....            | 10 |
| 3.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제9조) .....                 | 16 |
| 4.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제11조 및 제15조) .....   | 19 |
|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제시 기능 강화(제12조) .....       | 23 |
| 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강화(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 25 |
| 7.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제23조) .....            | 35 |
| 8.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제32조부터 제37조) .....         | 38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5. 10. 27.

다. 회 부 일 : 2025. 10.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 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환경보전·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9조).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실행력을 높이도록 함. 보고서는 종전대로 2년마다 발간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기능, 정수 등을 정비하고, 현행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소관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종전의 지정·운영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자.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차. 지속가능발전의 전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함(안 제38조).

카.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숙의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함(안 제41조).

### Ⅲ. 검토의견

#### 1. 입법의 배경 및 전부개정안의 구성

□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sup>1)</sup>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으로,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로 각각 정의되고 있음<sup>2)</sup>.

---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

□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99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선언’,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채택하고, 그 이행을 위한 세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sup>3)</sup>.

○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한 출발점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으로 볼 수 있음.

- 각국의 정상들은 리우선언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도 합의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켰음.

○ 2000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sup>4)</sup>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p>5)</sup>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하였음.

---

를 말한다.

3) 이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포털(<https://www.ncsd.go.kr/>) 참조

4)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도 2000년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체계가 여러차례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2000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 수립,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였음.

○ 2007년 국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sup>6)</sup>하였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음.

---

6)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 다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sup>7)</sup>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었고,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국가·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지속가능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국가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흡수되어 규정<sup>8)</sup>되었음.
- 아울러, 기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삭제되었음.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위상 변화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에는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sup>9)</sup>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참고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국회 지속가능발전

7) 2010. 1. 13. 제정, 2010. 4. 14. 시행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

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상위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하위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제연합(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17개 목표 중 하나로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기후위기대응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다시 마련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명시, 국가·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에 관한 사항도 다시 포함되었음.

□ 개정안은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제사회가 이행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직·예산·실행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처를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의 조문별 구성을 현행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서는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함.

【표1】전부개정안의 구성

| 현 행                                                  | 전부개정안                                                         | 비고         |
|------------------------------------------------------|---------------------------------------------------------------|------------|
| <b>제1장 총칙</b>                                        |                                                               |            |
| · 목적·정의·기본원칙(제1조~제3조)                                | · 목적·정의·기본원칙(제1조~제3조)                                         | 일부개정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4조·제5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4조~제5조)                           | 일부개정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동일         |
| <b>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b>                        |                                                               |            |
| · 국가 및 지방기본전략(제7조·제8조), 추진계획(제9조·제10조)               | · 국가 및 지방기본전략(제7조·제8조), 추진계획(제9조·제10조)                        | 일부개정       |
| · 추진상황의 점검(제11조)                                     | · 추진상황의 점검(제11조)                                              | 일부개정       |
|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제12조)                                |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제12조)                                         | 일부개정       |
|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제13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제14조)    |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제13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제14조)             | 일부개정       |
| <b>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b>                                  |                                                               |            |
|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5조)                          |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5조)                                   | 동일         |
| · 지속가능성보고서(제16조)                                     | · 지속가능성보고서(제16조)                                              | 동일         |
| <b>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b>                                |                                                               |            |
| · 국가위원회 설치·구성 등(제18조)                                | <b>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b><br>·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제17조~제20조) | 일부개정       |
|                                                      | · 사무처 및 연구센터 설치 등(제21조~제23조)                                  | 신설         |
|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공무원 등 파견 요청, 책임관 지정 등(제20조~제22조)   |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역 협의회 및 책임관 지정 등(제24조~제27조)                | 일부개정<br>신설 |
| <b>제5장 지속가능발전시책</b>                                  |                                                               |            |
|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제23조~제25조)   |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사회 구현, 생태적 건강성·청정성 기반 환경 조성(제28조~제30조)       | 일부개정       |
| · 이해관계자 협력(제26조)                                     | · 이해관계자 협력(제31조)                                              | 동일         |
| <b>제6장 지속가능발전기금</b>                                  |                                                               |            |
|                                                      | · 기금 설치, 용도, 운용주체 등(제32조~제37조)                                | 신설         |
| <b>제6장 보칙</b>                                        |                                                               |            |
|                                                      | <b>제7장 보칙</b><br>· 지속가능발전주간(제38조)                             | 일부개정       |
| ·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교육·홍보, 국민의견 수렴, 자료제출 요구 등(제27조~제30조) | ·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교육·홍보, 국민의견 수렴, 자료제출 요구 등(제39조~제42조)          |            |
|                                                      |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3조)                                       | 신설         |
| · 국제규범대응, 국회 등 보고(제31조·제32조)                         | · 국제규범대응, 국회 등 보고(제44조·제45조)                                  |            |

## 2. 목적·정의·기본원칙 등(제1조~제3조)

□ 개정안은 ‘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 ‘지속가능경영’,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를 정의 조항에 포함하고, 목적 및 기본원칙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u>기후·환경 위기 극복을</u>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u>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 조성</u> 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br>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u>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u>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br>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u>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이</u>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 |

|                                                                                                                                                                                                                                                                                                                                                                                                                                                                            |                                                                                                                                                                                                                                                                                                                                                                                                                                                                                                                                                                                                                                                     |
|----------------------------------------------------------------------------------------------------------------------------------------------------------------------------------------------------------------------------------------------------------------------------------------------------------------------------------------------------------------------------------------------------------------------------------------------------------------------------|-----------------------------------------------------------------------------------------------------------------------------------------------------------------------------------------------------------------------------------------------------------------------------------------------------------------------------------------------------------------------------------------------------------------------------------------------------------------------------------------------------------------------------------------------------------------------------------------------------------------------------------------------------|
| <p>전을 말한다.</p> <p>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p> <p>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p> <p>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p> <p>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p> | <p>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p> <p>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p> <p>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p> <p>5. “<u>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u>”이란 <u>생태적 한계를 존중하고 자연의 회복력과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을 말한다.</u></p> <p>6.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u></p> <p>7.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p> |
|----------------------------------------------------------------------------------------------------------------------------------------------------------------------------------------------------------------------------------------------------------------------------------------------------------------------------------------------------------------------------------------------------------------------------------------------------------------------------|-----------------------------------------------------------------------------------------------------------------------------------------------------------------------------------------------------------------------------------------------------------------------------------------------------------------------------------------------------------------------------------------------------------------------------------------------------------------------------------------------------------------------------------------------------------------------------------------------------------------------------------------------------|

|                                                                                                                                                                                                                                                                                                                                                                                                             |                                                                                                                                                                                                                                                                                                                                                                                                                     |
|-------------------------------------------------------------------------------------------------------------------------------------------------------------------------------------------------------------------------------------------------------------------------------------------------------------------------------------------------------------------------------------------------------------|---------------------------------------------------------------------------------------------------------------------------------------------------------------------------------------------------------------------------------------------------------------------------------------------------------------------------------------------------------------------------------------------------------------------|
| <p>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p>                                                                                                                                                                                                                                                                                                                                                                              | <p>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p> <p>8.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수익성뿐만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을 말한다. ESG 경영을 포함한다.</p> <p>9.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란 기업 등이 지속가능경영과 투자를 위해 실행해야 하는 핵심 경영 요소 및 전략을 말한다.</p>                                                                                                                                                      |
| <p>제3조(기본원칙)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li> <li>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li> <li>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li> <li>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li> </ol> | <p>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li> <li>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li> <li>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li> <li>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u>갈등과</u>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li> </ol> |

|                                                                                                                                                                                                                                                                                                                     |                                                                                                                                                                                                                                                                                                                                                                   |
|---------------------------------------------------------------------------------------------------------------------------------------------------------------------------------------------------------------------------------------------------------------------------------------------------------------------|-------------------------------------------------------------------------------------------------------------------------------------------------------------------------------------------------------------------------------------------------------------------------------------------------------------------------------------------------------------------|
| <p>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p> <p>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p> <p>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p> | <p>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며 <u>생물다양성을 제고하여 자연의 회복력을 증진함으로써</u>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p> <p>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p> <p>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p> |
|---------------------------------------------------------------------------------------------------------------------------------------------------------------------------------------------------------------------------------------------------------------------------------------------------------------------|-------------------------------------------------------------------------------------------------------------------------------------------------------------------------------------------------------------------------------------------------------------------------------------------------------------------------------------------------------------------|

□ 먼저 ‘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정의 조항(제2조)에서 이 중 경제·사회를 각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정의조항에 ‘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을 추

가하여,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고 자연의 회복력과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으로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제5호)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아울러 목적 조항(제1조)에도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태적 건강성·청정성에 기반한 환경’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려는 환경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 제5조제2항<sup>10)</sup>은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3항<sup>11)</sup>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

---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으로 정의(안 제2조 제8호)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환경(Environmental) · 사회(Social) ·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안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를 ‘기업 등이 지속가능경영과 투자를 위해 실행해야 하는 핵심 경영요소 및 전략’으로 정의(안 제2조제9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이 정의조항을 활용하는 다른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제9조)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경우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p> | <p>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u>조례로</u>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p> |

|                                                                                      |                                                                                      |
|--------------------------------------------------------------------------------------|--------------------------------------------------------------------------------------|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 현행법과 개정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  
 록 하고(현행법 및 안 제8조),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  
 음.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  
 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방추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  
 게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방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고려사항 등 중에서 전  
 국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  
 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추진계획 수

립·이행 기준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지방추진계획 포함사항(제1항), 수립·변경 시 고려사항(제2항) 및 관련 절차(제3항, 제4항)를 규정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2)</sup>.

- 
-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제11조 및 제15조)

□ 개정안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앙·지방 추진계획의 추진상황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기존 2년 주기에서 매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2항).

○ 또한,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년마다</u>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년</u> 중앙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년마다</u>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년</u>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u>2년마다</u>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u>매년</u>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u>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
|----------------------------------------------------------------------------------------------------------------------------------------------------------------------------------------------------------------------------------------------------------------------------------------------------------------------------------------------------------------------------------------------------------|---------------------------------------------------------------------------------------------------------------------------------------------------------------------------------------------------------------------------------------------------------------------------------------------------------------------------------------------------------------------------------------------------------------------------------------------------------------------------------------------------------------------------------------------------------|

□ 현행법과 개정안은 모두 정부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 사항에 대해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중앙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20년 단위로 지방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이러한 중앙·지방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중앙·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점검·평가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중앙·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점검·평가 주기가 단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 상승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sup>13)</sup>에 반영하도록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이라 함) 시행령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sup>14)</sup>의 위원장이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sup>15)</sup>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탄소중립법」 개정에 따라 2026. 5. 12.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제시 기능 강화(제12조)

- 개정안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앙·지방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와 관계 없이 폭넓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① 국가위원회는 <u>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② 지방위원회는 <u>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앙·지방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의견 제시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국무조정실은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개정안에서 폭넓게 의견제시를 허용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강화(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개정안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 혁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민간 사무·활동에 대한 지원,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은 ▲위원정수를 일부 축소(60명 이내 → 50명 이내)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시·도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며,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1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u>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u>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u>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u>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8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                                                          |
|-----------------------------------------------------|----------------------------------------------------------|
|                                                     | 다.                                                       |
|                                                     | <u>1.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
|                                                     | <u>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u>           |
|                                                     | <u>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무 및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 |
|                                                     | <u>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민 의견의 수렴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u>              |
|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의 보급,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 11.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                                                     | <u>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
|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7.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8.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협의·조정, 점검에 관한 사항                       |
|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10.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국가이행보고서 공표에 관한 사항            |

|                                                                                                                                       |                                                                                                                   |
|---------------------------------------------------------------------------------------------------------------------------------------|-------------------------------------------------------------------------------------------------------------------|
|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
|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2. 제3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u>14.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u>                                                                                 |
| <u>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u>                                                                                                    | 15.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6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u>1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u> 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제19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 ③ 위원장은 <u>위촉위원</u>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전문가·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                                                                                                                                       | ③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u>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을 대통령이 임                   |

|                                                                                                                                                                                                                                                                                                                                                                                                                                                                          |                                                                                                                                                                                                                                                                                                                                                                                                                                                            |
|--------------------------------------------------------------------------------------------------------------------------------------------------------------------------------------------------------------------------------------------------------------------------------------------------------------------------------------------------------------------------------------------------------------------------------------------------------------------------|------------------------------------------------------------------------------------------------------------------------------------------------------------------------------------------------------------------------------------------------------------------------------------------------------------------------------------------------------------------------------------------------------------------------------------------------------------|
|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p> <p>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가능발전 전략</li> <li>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li> <li>3. 포용적 사회</li> <li>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li> <li>5. 이해관계자 협력</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li> </ol> <p>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p> | <p>명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⑤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 <p>정한다.</p> <p>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u></p> <p>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 <p>제21조(사무처의 설치)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u></p> <p>②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p> <p>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
|-------------------------------------------------------------------------------------------------------------------------------------------------------------------------------------------------------------------------------------------------------------------------------------------------------|---------------------------------------------------------------------------------------------------------------------------------------------------------------------------------------------------------------------------------------------------------------------------------------------------------------------------------------------------|

□ 먼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를,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sup>16)</sup>하는 위원회를 각각 의미<sup>17)</sup>함.
- 현행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자문위원회로 분류<sup>18)</sup>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목적에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 혁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민간 사무·활동에 대한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5조<sup>19)</sup>에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위원

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7)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참조

18) 2025년 기준,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21개이며, 이 중 1개의 행정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와 20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음.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내용의 전문성, ▲업무 성질의 신중성,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의 독자성, ▲업무의 계속성·상시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업무내용의 전문성 및 업무 성질의 신중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의 독자성이 인정되는지, 해당 업무의 계속성 및 상시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기존 중앙행정기관 권한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업무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위원정수를 축소하면서 시·도 지방협의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개정안 제25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장

---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의회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 참고로, 개정안 제25조는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 의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개 정 안                                                                                                                                                                                                                                     |
|-------------------------------------------------------------------------------------------------------------------------------------------------------------------------------------------------------------------------------------------|
| 제25조(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br>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br>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따라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변화 여부는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변화 및 협의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제한<sup>20)</sup>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

20)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

는데, 위원의 연임 횟수 및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다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 필요성과 위원의 전문성 및 활동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제한 횟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정무직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추진단’<sup>21)22)</sup>을 사무처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아래와 같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경제·사회·환경 간 균형 발전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행정비용,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sup>23)</sup>에 사무기구를 원칙적으로

---

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 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2)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구성 현황

단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겸임 / 부단장 및 3개팀(기획총괄팀, 경제 협력평가팀, 사회 기후소통팀)

23)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둘 수 없고,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7.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제23조)

□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한 연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지원,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br>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br>② 연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br>③ 연구센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④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1.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한 연구<br>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혁신, 연 |

|  |                                                                                                                                                                                                                                                                                   |
|--|-----------------------------------------------------------------------------------------------------------------------------------------------------------------------------------------------------------------------------------------------------------------------------------|
|  | <p>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p> <p>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지원</p> <p>4.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지원</p> <p>5.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p> <p>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⑥ 연구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제4항<sup>24)</sup>은 정부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2022년 현행법 제정 및 시행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나, 그 동안 지정되어오지 않다가 2026. 2. 18. 최초로 한국환경연구원을 지정하였음.

- 연구센터 지정·운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sup>25)</sup>이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에 2026년 기준 약 15억원의 사업

2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5) 2026. 2. 19. ~ 2028. 12. 31.

비를 지원할 예정임.

- 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지속가능성 평가, 국제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보망 구축·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연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인력양성·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 의견, 최근에 한국환경연구원이 현행법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센터를 신규로 설립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무조정실이 수행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2024. 9.)에 따르면, 연구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신설할 경우 기관 운영을 위해 연간 105억원에서 13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설립 초기 2년 간 연구센터의 안착을 위해서는 연간 약 257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sup>26)</sup>됨.

---

26) 총 임직원 수를 75명으로 가정하고 추산한 결과임.

## 8.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제32조부터 제37조)

-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기금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일반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특히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 기금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민간 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국제협력, ▲금융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제33조).
-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

| 개 정 안                                                                                      |
|--------------------------------------------------------------------------------------------|
| 제6장 지속가능발전기금                                                                               |
| 제32조(지속가능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4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전환전략 수립 지원 및 실증사업 지원
7.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34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술혁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민간 활동 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재원 조성, 운용·관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것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sup>27)</sup>는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세입 전액<sup>28)</sup>이 교통시설특별회계(68%)<sup>29)</sup>, 환경개선특별회계(23%)<sup>30)</sup>, 기후대응기금(7%)<sup>31)</sup>,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sup>32)</sup>로 배분<sup>33)</sup>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기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현행법 상 2028. 1. 1. 폐지될 예정임. 당초 2009년 폐지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폐지법률의 시행을 2028. 1. 1.로 수정하였음.

28) 2024년 기준 11.4조원

2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30)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33)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제소, 2025. 4. 참조

의 2%를 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분되고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배분 비율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sup>34)</sup>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함.

□ 다음으로, 개정안은 과거 「탄소중립법」을 참고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조직개편 및 「탄소중립법」 개정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법」은 2021년 제정 당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였으나<sup>35)</sup>, 2025년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sup>36)</sup>되었음.

○ 특히,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

34)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5) 법률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3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금 운용·관리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현재 기획예산처)로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